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정책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희망과 우려가 교차된다. 어떤 이는 자본·노동력·토지라는 전통적 생산요소 대신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등장한 창의력과,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를 강조한다. 하지만 정보접근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해 선진국으로의 정보중속, 지역간·계층간·도농(都農)간의 정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들도 있다. 정보 불평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도서관이 새로이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은 종래의 열람과 대본이라는 기능을 뛰어넘어 모든 지식정보콘텐츠를 수집하고 가공·축적 및 새로운 정보로 재생산함으로써 지식창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혜택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재분배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도서관 설립이념은 현재에도 유효한 명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로이 유통되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서관의 위상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다. 주5일 근

무제의 정착, 이용자의 정보욕구 급증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 도서관이 '공부방'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외부의 시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도서관이 진정한 지식정보의 저장고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위기와 기회가 엇갈리는 현실 속에서 2007년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작년 10월 정부 공포로 확정되었고 금년 4월 시행될 「도서관법」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부내 도서관정책기획단 설립, 광역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 지정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등 정책시스템의 전면개편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거점으로 도서관을 육성·지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방하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정책다원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거 「도서관및독서진흥법」하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등 여러 기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단순 자문기구 역할에 국한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못함에 비해, 새로이 규정된 위원회는 행정조직인 도서관정책기획단을 통해 범정

부차원의 정책입안과 집행기구로서 필요한 법적 토대를 확보하였다.

그동안 도서관 정책은 정책 수요계층인 국민보다는 정책 공급자인 부처 논리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특정 부처별로 자신의 행정통제범위에 속하는 관종별로 시행되어 부처차원에서 국가적 수준의 종적 계통은 완성되었으나, 지역차원에서 횡적 협력망 구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도서관법」 제12조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될 기획단은 문화부·교육부·행자부·정통부 등 다수 부처로 분산된 도서관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게 된다. 기획단은 도서관정책 관련 유관 법령 및 시책을 검토·조정하고, 종합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종을 통합하는 도서관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기술 환경에 도서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법 제22조 및 제24조는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차원의 정책 조정과 함께, 지역차원에서 관종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단위의 도서관정책 수립 및 추진주체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에 맞춰 문화관광부는 「도서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작업과 함께, 신설 도서관정책조직에 대한 직제 및 예산에 대해 행사부 및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과 예산규모는 법 시행시점에 확정된다.

위원회와 기획단 설치 후, 첫 과제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이다. 또한 도서관정책체계의 신속한 개편을 위해 금번 도서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유보되었던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전자출판물 등의 납본제도·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원화 문제 조정, 도서관 이용활성화,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학교·대학·전문·공공도서관과의 연계협력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읽었던 문헌 중에서, “도서관은 인간애로 봉사해라”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출범 그 자체가 도서관을 둘러싼 모든 현안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서관 현장 종사자이든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이든,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용자에 대한 봉사를 앞세우는 순수한 열정과 애정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국민 가까이 다가가는 실천적 성과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일차적 책임을 저야하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도서관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도서관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이정우)

이 정 우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기획단 설립반장(서기관)
scpo@mct.go.kr